이슈페이퍼 2023-17

KCTULI

2024년 예산(안) 분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김형남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 10.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 i

1. 서론 ····· 1

2.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분석 ····· 2
1) 부자 감세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 ····· 2
2) 재정지출 억제로 사회복지 축소 ····· 4

3.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 8
1)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 8
2) 부문별 예산 ····· 9
(1) 고용부문 예산 ····· 9
(2) 보건의료부문 예산 ····· 11
(3) 공적연금부문 예산 ····· 14
(4)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 ····· 15
(5) 노동부문 예산 ····· 16
(6) 노인부문 예산 ····· 19
(7) 주택부문 예산 ····· 20

4. 결론 ····· 23

참고문헌 ····· 28

요약

지난 9월 1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2005년 이후 20년간 역대 최저증가율로 재정 건전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했다.

2024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출 감소인지 따져보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과 감소한 사업을 조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2024년 국세 예상 수입 자료와 지출 예산안을 통해 국세 수입과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4년 국세 예상 수입은 2023년 예산 대비 33.1조 원 감소한 367.4조 원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국세가 36.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조 원 자동으로 감소하여 예산 총지출이 감소하였다. 2024년 정부지출 축소는 성공적인 지출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가 감소한 탓이다.

이러한 정부지출의 축소로 인해 통일·외교,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증가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결국 낮은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3장에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부문별 예산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2024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2023년 대비 16.9조 원(7.5%) 인상하여 복지예산을 크게 확대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는 고령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법정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액된 부문은 고용(-5.9%)과 보건의료(-37.8%) 부문이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문은 공적연금(13.4%)과 주택(11.8%), 노인(10.3%) 부문 순이다.

고용 부문 예산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고용창출 프로그램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특히 청년고용창출 세부사업 예산의 감액 폭이 크다.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비롯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예산과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비롯한 R&D분야 신규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다.

공적연금부문 예산은 4대 연금 모두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동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생계급여 보장성 확대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는 감액되었다.

노동부문 예산은 2023년과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중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노인부문 예산은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1.5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예산과 노인단체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주택 부문 예산은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이 2조 원 증액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융자는 1.1조 원 증액, 출자는 0.7조 원 감액으로 소폭 증대에 그쳤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예산은 42억 원 편성에 그쳤으며,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은 -14.3% 감소하여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미비하다.

4장은 결론으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과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는 줄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으나, 이는 고령화와 물가상승과 연동된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며,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최소 지출은 결국 '최소 복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1. 서론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일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는 기조의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612.1조 원이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9조 원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해 “2005년 이후 20년 내 역대 최저증가율”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확장정책으로 국가부채가 확대되었다며 재정준칙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3조 원을 ‘지출구조조정’했다며, 적극적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지출구조조정 23조 원의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출 감소인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과 감소한 사업을 조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024년 국세 예상 수입과 총지출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프로그램 예산과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2.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분석

1) 부자 감세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예산이 2023년 예산 400.5조 원 대비 -33.1조 원 감소한 367.4조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가 2023년 대비 -27.3조 원(-26.0%)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7.3조 원(-24.6%), 상속증여세 -2.5조 원(-14.4%) 순으로 감소하여 내국세가 총 -36.3조 원(-1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증가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4.2조 원(37.5%) 증가하며, 이어 근로소득세 1.5조 원(2.4%), 교육세 1.5조 원(31.1%)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24년 국세 예상 수입

(단위 : 조 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23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95.9	400.5	367.4	-33.1	-8.3
[일반회계]	385.2	390.3	356.2	-34.1	-8.7
◇ 내 국 세	352.3	358.0	321.7	-36.3	-10.1
ㅇ 소 득 세	128.7	131.9	125.8	-6.0	-4.6
▪ 종 합 소 득 세	23.9	24.7	23.1	-1.7	-6.7
▪ 양 도 소 득 세	32.2	29.7	22.4	-7.3	-24.6
▪ 근 로 소 득 세	57.4	60.6	62.1	1.5	2.4
ㅇ 법 인 세	103.6	105.0	77.7	-27.3	-26.0
ㅇ 상 속 증 여 세	14.6	17.1	14.7	-2.5	-14.4
ㅇ 부 가 가 치 세	81.6	83.2	81.4	-1.8	-2.2
ㅇ 개 별 소 비 세	9.3	10.2	10.2	0.0	0.0
ㅇ 증 권 거 래 세	6.3	5.0	5.4	0.4	8.2
ㅇ 인 지 세	0.8	0.8	0.9	0.0	4.3
ㅇ 과 년 도 수 입	7.3	4.8	5.7	0.9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5.3	4.2	37.5
◇ 관 세	10.3	10.7	8.9	-1.8	-16.9
◇ 교 육 세	4.6	4.7	6.2	1.5	31.1
◇ 종합부동산세	6.8	5.7	4.1	-1.6	-28.1
[특별회계]	10.8	10.2	11.2	1.0	9.7
◇ 주 세	3.8	3.2	3.6	0.4	11.2
◇ 농어촌특별세	7.0	7.0	7.6	0.6	9.0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3.8.29)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연초 가스, 전기료 인상과 하반기 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구간별 1%p 낮추면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국세 수입만 감소하여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인하→기업 수익성 제고→기업 투자 및 고용 증가→GDP 성장→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기업은 새로 구상한 사업의 전망이 좋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법인세만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표 2] 세목별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 조 원, %)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23년 예산 대비	
				증감	%
총 국 세	395.9	400.5	341.4	-59.1	-14.8
[일반회계]	385.2	390.3	331.1	-59.1	-15.2
◇ 내 국 세	352.3	358	303.1	-54.8	-15.3
ㅇ 소 득 세	128.7	131.9	114.2	-17.7	-13.4
▪ 종 합 소 득 세	23.9	24.7	21.1	-3.6	-14.5
▪ 양 도 소 득 세	32.2	29.7	17.5	-12.2	-41.2
▪ 근 로 소 득 세	57.4	60.6	58.6	-2.0	-3.3
ㅇ 법 인 세	103.6	105	79.6	-25.4	-24.2
ㅇ 상 속 증 여 세	14.6	17.1	13.8	-3.3	-19.5
ㅇ 부 가 가 치 세	81.6	83.2	73.9	-9.3	-11.2
ㅇ 개 별 소 비 세	9.3	10.2	9	-1.2	-12.0
ㅇ 증 권 거 래 세	6.3	5	6.5	1.5	29.9
ㅇ 인 지 세	0.8	0.8	0.8	-0.0	-5.1
ㅇ 과 년 도 수 입	7.3	4.8	5.4	0.6	12.7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2.8
◇ 관 세	10.3	10.7	7.3	-3.5	-32.3
◇ 교 육 세	4.6	4.7	5.2	0.5	11.1
◇ 종합부동산세	6.8	5.7	4.7	-1.0	-18.3
[특별회계]	10.8	10.2	10.3	0.1	0.7
◇ 주 세	3.8	3.2	3.5	0.3	8.6
◇ 농어촌특별세	7	7	6.8	-0.2	-2.8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3.9.18)

이어서,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국세수입 재추계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표 2]에서 보여지듯이 2023년 국세수입 예상액은 400.5조 원에서 341.4조 원으로 -59.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2023년 예산 대비 법인세 -25.4조 원(-24.2%), 양도소득세 -12.2조 원(-41.2%) 등 대부분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런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국세 수입이 2024년 예산안(367.4조 원)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재정지출 억제로 사회복지 축소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23조 원을 '지출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예산상 총수입은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56.9조 원이며,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8.1조 원(2.8%) 증가한 656.9조 원이다.

국세수입 중 국세외 수입은 244.7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9.5조 원(8.7%) 증가하였지만, 국세수입은 367.4조 원으로 -33.1조 원(-8.3%) 감소하였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큰 이유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벌·부자 감세로 인해 내국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대비 2.8% 증가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내국세 예상 수입이 -36.3조 원(-10.1%)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8.5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조 원 등 지방이전재원이 총 -15.4조 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17개 시도 교육청)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구성된다. 즉,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으로 자동으로 강제 할당되기 때문이다.

만약 2024년 내국세가 감소하지 않고 종부세 등 감세 조치 없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액은 672.3조 원으로 2023년도 대비 5.3% 증가한 규모가 된다. 이는 2023년 전년 대비 5.1% 증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대한 예산이다.(이상민. 2023)

[표 3] 2024년 정부 재정 운용

(단위 : 조 원, %)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수입	625.7	612.1	-13.6	-2.2
국세수입	400.5	367.4	-33.1	-8.3
국세외수입	225.2	244.7	19.5	8.7
총지출	638.7	656.9	18.2	2.8

자료 : 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 이내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GDP 대비 -2.6%(-58.2조 원)에서 2024년 -3.9%(-92.02조 원)로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4%에서 5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을 20년 만에 역대 최저증가율로 축소했음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더 악화되는 이유는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다며 건전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2.2%로, 총수입이 감소하는데 총지출이 증가하니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 4] 2024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조 원, %)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증감액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13.1(-0.6%)	-44.8(-1.9%)	-31.7(-1.3%p)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58.2(-2.6%)	-92.0(-3.9%)	-33.8(-1.3%p)
국가채무(GDP 대비)	1,134.4(50.4%)	1,196.2(51.0%)	+61.8(+0.6%p)

자료 : 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05년 이후 20년 내 역대 최저 증가(2.8%p)”한 2024년 예산안은 정부의 성공적인 지출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가 감소한 탓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결국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는 재정 건전성과 감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재정(public finace)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정부는 재정을 통해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재정 건전화(‘작은 정부’)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지출 억제(최소화·효율화), 낮은 사회복지 재정 비중은 재정이 지닌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사회복지지출은 최하위 수준으로 국제기구(OECD·IMF)로부터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21년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 선진 각국의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 체제의 재정 건전화는 대부분 후퇴하는게 일반적 흐름이며, 국가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재정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전략하에 세계적인 흐름 및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 비중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5] 16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십억 원, %)

분야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및안전	22,931	24,332	1,401	6.1	4.6
과학기술	**9,862**	**9,124**	**-738**	**-7.5**	**8.7**
교육	**96,273**	**89,655**	**-6,618**	**-6.9**	**10.6**
교통및물류	20,821	21,773	952	4.6	7.8
국방	55,286	57,572	2,286	4.1	7.2
국토및지역개발	4,167	4,362	195	4.7	3.2
농림수산	24,377	25,377	1,000	4.1	5.4
문화및관광	8,606	8,738	132	1.5	7.2
보건	**20,027**	**19,006**	**-1,021**	**-5.1**	**16.4**
사회복지	205,976	223,876	17,900	8.7	1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04	27,269	1,265	4.9	9.3
일반·지방행정	**112,154**	**111,262**	**-892**	**-0.8**	**12.9**
통신	8,985	9,294	309	3.4	6.5
통일·외교	6,409	7,656	1,247	19.5	8.0
환경	12,249	12,555	306	2.5	14.9
예비비	4,600	5,000	400	8.7	10.4
총계	638,728	656,851	18,123	2.8	10.2

1. * 2018~2023년 연평균 증가율
2. 각 년도 추경예산 기준

재정지출 축소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서비스가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표 5]에서 보듯이 2018년~2023년까지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0.2%인데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매우 낮다. 분야별 재원의 증감율은 통일·외교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년대비 감소하는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그 차이가 10%~20%로 매우 크며, 사회복지, 문화및관광, 환경 분야 등의 증가율도 연평균 증가율을 한참 하회하고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 재정지출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1)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대 중점투자 분야로 '① 약자 복지 강화, ② 미래준비 투자,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으로 정했다.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약자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 예산인 보건·복지·고용 분야(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1]의 예산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예산

(단위 : 십억 원, %)

분야	부문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	**고용**	**23,632**	**22,244**	**-1,387**	**-5.9**
	고용노동일반	634	650	16	2.5
	공적연금	71,325	80,856	9,532	13.4
	기초생활보장	19,135	20,826	1,691	8.8
	노동	10,728	10,749	21	0.2
	노인	23,229	25,633	2,404	10.3
	보훈	6,247	6,469	222	3.5
	사회복지일반	1,013	1,049	36	3.6
	아동·보육	9,848	10,856	1,009	10.2
	여성·가족·청소년	1,530	1,678	148	9.7
	주택	33,441	37,404	3,963	11.8
	취약계층지원	5,214	5,462	248	4.8
보건	건강보험	12,410	13,974	1,564	12.6
	보건의료	**6,941**	**4,316**	**-2,625**	**-37.8**
	식품의약안전	676	716	40	5.9
총계		226,003	242,882	16,879	7.5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6]의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부문이 -1.4조 원(-5.9%),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이 -2.6조 원(-37.8%)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정부 재정의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재정을 합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라 하며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한 분류체계이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문은 공적연금이 9.5조 원(13.4%), 주택부문 3.9조 원(11.8%), 노인 부문 2.4조 원(10.3%) 순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4년 예산은 242.9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6.8조 원(7.5%) 증가하였다.

2) 부문별 예산

(1) 고용부문 예산

2024년 고용부문 예산은 2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5.9%) 감액되었다.

[표 7]의 고용부문 프로그램예산을 살펴보면 고용안전망확충예산이 -7천억(-5.1%) 감액되었고, 고용창출 예산이 -1.1조 원(-36.6%), 공정한전환예산이 -20억 원(-12.5%) 감액되었다.

[표 7] 고용부문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분야_부문	프로그램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_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215	215	0	0.0
	고용안전망확충	13,959	13,246	-713	-5.1
	고용창출	3,106	1,968	-1,138	-36.6
	고용평등증진	2,592	2,998	406	15.6
	공정한전환	15	13	-2	-12.5
	장애인고용증진	766	817	50	6.6
	저탄소생태계조성	15	15	0	0.0
	직업능력개발	2,962	2,972	10	0.3
합 계		23,632	22,244	-1,387	-5.9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8]에서 고용부문 예산 중 감액 폭이 큰 10대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가 2023년 대비 -2,830억 원(-23.1%), 구직급여가 -2,700억 원(-2.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2,390억 원(-22.2%) 감액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중 큰 폭으로 감액된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가 -2,810억 원(-65.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이 -2,400억 원(-27.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120억 원(-92.6%),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2])가 -1,400억 원(-66.4%), 고용유지지원

2) 고용보험기금

금이 -1,260억 원(-63.8%), 고용창출장려금이 -910억 원(-65.4%)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감액 예산은 내일배움카드(고보) -1,530억 원(-17.3%)이다.

[표 8] 고용부문 주요 감액 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25	943	-283	-23.1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구직급여	11,184	10,914	-270	-2.4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76	838	-239	-22.2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296	149	-281	-65.3
고용	고용창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889	649	-240	-27.0
고용	고용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9	17	-212	-92.6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11	71	-140	-66.4
고용	고용창출	고용유지지원금	197	71	-126	-63.8
고용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140	48	-91	-65.4
고용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고보)	887	734	-153	-17.3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9] 고용부문 주요 증액 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고용	고용평등증진	모성보호육아지원	2,101	2,498	397	18.9
고용	고용창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26	238	112	88.6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조기재취업수당	387	464	77	20.0
고용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일반)	519	585	66	12.7
고용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03	357	54	17.8
고용	고용평등증진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0	44	44	신규
고용	고용창출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41	83	42	104.5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79	32	39	14.1
고용	고용평등증진	고용안정장려금	200	232	32	16.2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55	184	29	18.9
고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장려금	298	323	26	8.6

-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9]의 고용부문 증액사업은 모성보호 육아지원예산이 3,970억 원(18.9%)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120억 원(88.6%), 조기재취업수당 770억 원(20.0%) 순이다. 또한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예산이 440억 원 신규로 편성되었으

며,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예산이 420억 원 증액되어 2023년 대비 2배로 증액되었다.

고용부문의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고용창출 예산의 감액이다.

고용부문 세부사업 중 청년 대상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증액된 사업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과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사업이며, 감액된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으로 총예산 1.2조 원으로 2023년 1.9조 원 대비 -7,190억 원(-37.3%)이 감액되었다.

[표 10] 고용부문 청년 대상 세부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고용	고용창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26	238	112	88.6
고용	고용창출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41	83	42	104.5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11	71	-140	-66.4
고용	고용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9	17	-212	-92.6
고용	고용창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889	649	-240	-27.0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30	149	-281	-65.3
소 계			1,926	1,207	-719	-37.3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정부가 이야기하는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하나인 “미래 준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고용창출과 고용안전망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정작 고용창출과 고용안전망확충 예산은 2023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다.

(2) 보건의료부문 예산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2023년 6.9조 원에서 2024년 4.3조 원으로 -37.8% 감소하였다. 그중 감염병 위기 대응 프로그램이 -1.3조 원(-85.6%), 공공보건의료 확충프로그램이 -1.4조 원(-73.3%)으로 크게 감액되었다.

또한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소록도병원 예산 등 지방 국립병원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으며,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 -190억 원(-20.7%), 의료안전 예방관리가 -90억 원

(-1.1%),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이 -40억 원(-7.65) 감액되었다.

[표 11] 보건의료부문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분야_부문	프로그램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보건_보건의료	감염병위기대응	1,492	214	-1,278	-85.6
	감염병정책관리	130	87	-43	-32.8
	감염병진단분석	34	36	2	5.6
	공공보건의료확충	1,963	524	-1,440	-73.3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3	5	1	34.7
	국립공주병원	17	17	1	3.0
	국립나주병원	22	24	2	9.7
	국립마산병원	20	20	0	0.2
	국립목포병원	26	25	-1	-5.2
	국립부곡병원	21	20	-1	-4.8
	국립정신건강센터	44	46	1	3.1
	국립춘천병원	16	17	1	8.6
	국민건강생활실천	556	586	30	5.4
	만성질환관리	92	73	-19	-20.7
	보건산업육성	914	989	76	8.3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09	114	6	5.3
	보건의료연구관리	172	188	16	9.4
	소록도병원	11	10	-2	-15.8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0.2	0.2	0	-2.2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73	299	25	9.3
	의료안전예방관리	827	818	-9	-1.1
	질병관리행정지원	145	155	10	6.7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52	48	-4	-7.6
소 계		**6,939**	**4,315**	**-2,626**	**-37.8**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12]에서 보건의료부문 세부사업 중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관련 예산(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3조 원,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0.9조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0.5조 원, 감염병예방관리 -260억 원 등)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예산도 -5,310억 원(-99.5%) 감액되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160억 원(-48.6%)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관리 -160억 원(-22.7%) 감액되었다.

[표 12] 보건의료부문 주요 감액 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보건의료	감염병위기대응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438	185	-1,253	-87.1
	공공보건의료확충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538	13	-940	-98.7
	공공보건의료확충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534	23	-531	-99.5
	의료안전예방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56	0	-456	-100.0
	공공보건의료확충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0	0	-30	-100.0
	감염병정책관리	감염병예방관리	26	0	-26	-100.0
	감염병정책관리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24	33	-21	-86.1
	보건산업육성	첨단의료기술개발(R&D)	19	0	-19	-100.0
	국민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사업관리	72	56	-16	-22.7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33	17	-16	-48.6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13]의 보건의료부문 증액사업 중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4,560억 원(127.7%)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540억 원, 한국형 ARPA-H[3] 프로젝트 500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470억,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 220억 원,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구축(R&D) 170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 보건의료부문의 R&D 사업은 1.0조 원으로 전년대비 1,150억 원 증가하였으며, 한국형 ARPA-H를 비롯한 바이오 연구사업 등 신규 R&D 사업에 1,230억 원이 책정되었다.

2024년 R&D 사업예산은 25.9조 원으로 전년대비 -5.2조 원(-16.6%) 감액되었으나 보건의료부문의 R&D사업 예산은 11.5%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R&D)에 7,801억 원(전년대비 834억 원 증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3) 첨단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산하 기구, 우리나라는 미국의 ARPA-H를 벤치마킹해 2033년까지 10년 동안 1.9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13] 보건의료부문 주요 증액 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보건의료	의료안전예방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358	814	456	127.7
	국민건강생활실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0	54	54	신규
	보건산업육성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0	50	50	신규
	공공보건의료확충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	0	47	47	신규
	보건산업육성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13	41	28	210.2
	보건산업육성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4	29	25	608.7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1	55	24	78.4
	보건의료연구관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R&D)	0	22	22	신규
	감염병정책관리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0.8	20	19	2180.9
	보건산업육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0	17	17	신규

-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3) 공적연금부문 예산

공적연금부문 예산은 2024년 80.8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3.4%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다.

[표 14]의 공적연금 프로그램예산을 보면 공무원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급도 인상되었다.

4대 연금 모두 법적 의무지출이나 보장성을 높이는 법 개정은 없었기에 공적연금 부문의 증액은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대 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3% 인상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부문 예산 인상은 정부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물가상승과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표 14] 공적연금예산

(단위 : 십억 원, %)

분야_부문	프로그램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_공적연금	공무원복지서비스운영	1,723	1,470	-252	-14.6
	공무원연금급여지급	22,698	24,884	2,186	9.6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73	71	-1	-1.8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53	568	15	2.8
	국민연금운영	38	41	3	7.4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36,229	43,373	7,144	19.7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등)	340	346	6	1.6
	군인연금(연금정책)	3,846	4,041	195	5.1
	군인연금기금(기금운영비)	0.3	0.3	0	1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853	693	-161	-18.8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4,919	5,337	418	8.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53	32	-21	-38.8
	차입금이자상환	0.1	0.1	0	0.0
합 계		71,325	80,856	9,532	13.4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4)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은 2024년 20.8조 원으로 전년대비 1.7조 원(8.8%) 증가하였다.

[표 15] 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 예산안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014	7,541	1,527	25.4
	기초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2,572	2,742	170	6.6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694	748	55	7.9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28	276	48	21.1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315	358	43	13.6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8	43	4	11.5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57	160	3	2.0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8	19	0.7	3.9
	기초생활보장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0.002	0.007	0.005	250.0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9,098	8,938	-161	-1.8
소 계			19,135	20,826	1,691	8.8

-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15]의 세부사업 예산을 확인해보면, 먼저 생계급여가 1.5조 원(25.4%)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생계급여 증액은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로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1,700억 원(6.6%), 교육급여 30억 원(2.0%) 증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증액되었다.

한편 의료급여는 전년대비 -1,610억 원(-1.8%) 감액되었다.

(5) 노동부문 예산

2024년 노동부문 예산은 10.7조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노동부문 예산 중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예산이 -1,410억 원(-15.6%)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고용노동행정지원 30억 원(0.7%), 노사정책 40억 원(8.4%), 산업재해 예방 720억 원(5.6%), 산재보험 810억 원(1.0%) 등이다.

[표 16] 노동부문 예산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465	469	3	0.7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902	762	-141	-15.6
	노사정책	53	58	4	8.4
	산업재해예방	1,292	1,365	72	5.6
	산재보험	8,015	8,097	81	1.0
		10,728	10,749	21	0.2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표 17]에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프로그램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이 전액 감액(-14억 원)되었으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 24억 원이 책정되었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2017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

용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추경)하여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으로 2023년까지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었으나 2024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감액되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낮은 처우,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4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업은 2021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다시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다만, 2024년 세부사업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진행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표 17] 노동부문 세부사업 예산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복지기금지원	15	23	8	50.6
		퇴직연금 사업운영	16	22	7	42.9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0	2.4	2.4	신규
		생략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1.4	0	-1.4	-100.0
		신용보증대위변제	34	30	-3	-10.0
		근로조건개선지원	17	12	-5	-28.7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48	40	-8	-16.8
		생활안정자금(융자)	150	88	-62	-41.0
		대지급금지급	559	475	-84	-15.1
	산업재해예방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356	459	102	28.7
		업종별재해예방	132	146	14	10.7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8	18.0	11.2	164.4
		생략				
		산재예방시설건립	21	4	-16	-78.7
		클린사업장조성지원	507	472	-35	-6.9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7,792	7,876	84	1.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5	20	5	33.3
		생략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7	14.3	-1.4	-9.2
		산재병원지원	32	30	-2	-8.8
		산재보험 시설건립	18	7	-11	-60.4

-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프로그램 중 생활안정정자금(융자)가 -620억 원(-41.0%), 대지급금지급[4]이 -840억 원(-15.1%)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및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중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이 1,020억 원(28.7%), 업종별 재해예방이 140억 원(10.7%) 증액되었으며, 산재예방시설건립이 -160억 원(-78.7%),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이 -350억 원(-6.9%) 감액되었다.

산재보험 프로그램 중 산재보험급여가 840억 원(1.1%),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이 50억 원(33.3%) 증액되었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이 -14억 원(-9.2%), 산재병원지원이 -20억 원(-8.8%), 산재보험 시설건립이 -110억 원(-60.4%) 감액되었다.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중 감액 폭이 큰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의 교체 및 뿌리산업 및 끼임·추락 고위험 TOP3 업종[5]의 위험공정·장비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예방시설건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여수, 익산등에 특화된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고, 호남(전남) 및 중부(인천) 소재 노후 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이다.

산재보험 프로그램중 감액사업인 산재병원지원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등의 사업지원 예산으로 울산지역 공공병원 건립사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4)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6) 노인부문 예산

노인부문 예산은 2024년 25.6조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10.3%) 증액되었다.

노인부문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기초연금지급예산이 전년대비 1.7조 원(9.0%)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정책적 반영이라기보다는 인구증가와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예산이 4,860억 원 증가(31.6%), 노인단체 지원이 50억 원(6.1%) 확대되었다.

[표 18] 노인부문 증액 세부사업 예산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노인	노인생활안정	기초연금지급	18,530	20,201	1,671	9.0
노인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540	2,026	486	31.6
노인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45	2,498	253	11.3
노인	노인생활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2	546	44	8.8
노인	노인생활안정	노인단체 지원	79	84	5	6.1
노인	노인의료보장	치매관리체계 구축	190	191	0.9	0.5
노인	노인생활안정	노인보호전문기관	12	12	0	3.6
노인	노인생활안정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0.4	0.4	0	2.6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0만 개로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으며,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10%(6.1만 개)를 줄이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패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원상복구 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급격한 노령화와 노인빈곤율 증가 등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일자리 등 노인부문 예산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나, 유독 노인부문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정부는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 19]에서 보듯이 2024년 예산안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노인단체,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액되었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은 2023년 75억 원에서 2024년 39억 원으로 -47.4%나 감액되었다.

노인단체지원은 노인복지 민간단체 및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경로당 광역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100%를 지원하며 2023년 8억원이 책정되었고, 대한노인회운영지원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 지원되며 2023년 34억원이 책정되었다. 그 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자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표 19]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보조금)

(단위 : 십억 원, %)

분야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	노인생활안정	노인단체 지원	79	84	5	6.1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단체	6.2	6.8	0.6	10.0
문화 및 관광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0	37	7	24.3
과학기술	과학문화창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R&D)	14	13	-1	-9.5
문화 및 관광	문화재정책기반구축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2	1.0	-0.2	-18.2
	전문체육육성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42	37	-6	-13.2
	전문체육육성	주최단체지원	156	130	-26	-16.6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95	92	-3	-3.0
사회복지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4.8	34.1	-.7	-1.9
일반·지방행정	지방자치분권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5	3.9	-3.5	-47.4
환경	자연생태 보전	자연보전단체	0.3	0	-0.3	-100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7) 주택부문 예산

주택부문 예산은 37.4조 원으로 2023년 대비 4.0조 원(11.8%) 증가하였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가 2조 원(19.1%) 증가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임대주택지원(융자)가 1.1조 원(9.6%),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이 1조 원(32.2%) 증액되었다.

반면 도시재생 활성화는 -1,540억 원(-19.3%) 감액되었고, 임대주택지원(출자)는 -7,020억 원(-12.2%) 감액되었다.

[표 20] 주택부문 프로그램 예산

(단위 : 십억 원, %)

분야_부문	프로그램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_주택	구입 · 전세자금	10,380	12,365	1,984	19.1
	도시재생활성화	798	644	-154	-19.3
	분양주택등지원	1,421	2,063	642	45.2
	임대주택지원(융자)	11,803	12,933	1,130	9.6
	임대주택지원(출자)	5,744	5,041	-702	-12.2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3,296	4,359	1,062	32.2
합 계		33,441	37,404	3,963	11.8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주택부문 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융자하는 사업에 2조 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분양주택(융자)사업으로 0.6조 원 증액하여 주택을 분양하거나 구매하는데 융자금 지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기타경비와 이차보전지원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540억 원(-19.3%)이 감소하였다.

임대주택(융자) 사업은 1.1(9.6%)조 원 증가한 데 비해 임대주택(출자) 사업은 -0.7조 원(-12.2%) 감액되어 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소폭 증대에 그쳤다.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은 1.1조 원(32.2%)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액 0.7조 원과 이차보전지원 0.6조 원에 기인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 42억 원 편성에 그쳤으며,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은 -0.4조 원(-14.3%)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가 6천 명을 넘었으며, 최근 수원 전세 사기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대부분 다가구 임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책이 필요하다.

[표 21] 주택부문 세부 사업예산

(단위 : 십억 원, %)

부문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주택	구입 · 전세자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	10,380	12,365	1,984	19.1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차보전 지원	766	1,394	628	82.0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0	700	700	신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0	4.2	4.2	신규
	임대주택지원(출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839	2,434	-405	-14.3

자료 : 2024년 예산안(2023)

4. 결론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재벌·부자 감세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면서 정부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재정지출 억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서비스가 축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하며,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시장만능주의”정책이다.

하지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내국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었으며, 2024년 총수입은 감소(-2.2%)하는데, 총지출이 증가(2.8%)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이유는 법인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다.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7.1조 원으로 올해 대비 7.6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기업 감면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4년 대기업 감면액은 6.6조 원으로 2023년 4.4조 원 대비 2.2조 원 이상 늘었다.

[표 22]의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조세감면 혜택은 개인이 2023년 62.0%(총계 대비)에서 59.6%로 2.4% 축소된 데 비해, 기업은 37.3%에서 39.7%로 2.4%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감면 비중이 2023년 16.9%에서 21.6%로 4.7% 확대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표 22]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269,883	68.3	284,524	66.0	306,125	66.6
	고소득자	125,080	31.7	146,255	34.0	153,833	33.4
	계	394,963	100.0	430,779	100.0	459,958	100.0
	(총계 대비)		(62.2)		(62.0)		(59.6)
기업	중소기업	160,895	68.1	179,188	69.1	194,064	63.4
	중견기업	9,378	4.0	9,728	3.8	14,829	4.8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38,878**	**16.5**	**43,727**	**16.9**	**66,005**	**21.6**
	기타기업	27,159	11.5	26,678	10.3	30,960	10.1
	계	236,311	100.0	259,322	100.0	305,859	100.0
	(총계 대비)		(37.2)		(37.3)		(39.7)
구분곤란			4,210		4,887		5,327
총 계			635,484		694,988		771,144

자료 :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기획재정부

* 근로소득 7,800만 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4.6%의 기업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48.0%) 채용하지 않을 것(16.6%)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투자도 법인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는 -8.9% 줄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재벌과 부자 감세로 인해 2023년 59.1조 원이라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지출은 줄어들었다.

재벌과 부자는 감세로 인해 부를 축적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피해는 지방정부와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결국 세입 감소와 지출억제로 인해 재정 총량이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분석 결과 복지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대된 복지예산 대부분은 법정 의무지출이며, 특정 부문의 지출만 확대한 편향적인 예산이다.

정부는 2024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2023년 대비 16.9조 원(7.5%) 인상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는 고령화 및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법정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첫째,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프로그램이 7.1조 원(19.7%), 노인생활안정 프로그램 2.2조 원(10.5%), 공무 연 연금급여 지급 프로그램 2.2조 원(9.6%), 주택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이 2조 원(19.1%),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1.5조 원(9.2%)이다.

여기서 국민연금운영과 노인생활안정(기초연금), 공무 연금급여 지급 예산이 11.5조 원 증가한 이유는 정책 목적이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법정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에 해당하는 3.5조 원 증액은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예산은 보건의료부문이며, 이는 감염병위기대응 프로그램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3조 원(-87.1%), 공공보건의료 확충프로그램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0.9조 원(-98.7%),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0.5조 원(-99.5%)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부문은 고용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고용안전망 확충프로그램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가 -2,830억(-23.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 -2,390억 원(-22.2%) 감액되었다. 특히 고용창출 예산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2,810억 원(-65.3%), 청년일자리창출지원 -2,400억 원(-27.0%), 청년내일채움공제 -1,400억 원(-66.4%) 등 청년고용창출 세부사업에서 -7,190억

원(-37.3%)이 감액되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청년과 고용안전망은 포함되지 않는 듯하다.

올해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0만 3천 명 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신규 채용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청년 고용창출 예산 감액은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반면 노인부문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4,860억 원(31.6%) 증액되었으며, 노인단체 지원이 50억 원 증액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해 비판하며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이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노인부문 예산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공공연히 외치면서 유독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증액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감액한 반면, 지자체를 통한 관변단체 보조금은 비상식적으로 증액되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 원, 바르게살기 166억 원, 자유총연맹 122억 원으로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 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3대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경향신문, 2023.10.17.)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여부를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주택부문 예산은 주택 구입·전세 자금(융자)사업이 2조 원으로 증액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출자사업은 감액되고 융자사업 중심으로 증액되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융자는 1.1조 원 증액, 출자는 0.7조 원 감액으로 소폭 증대에 그쳤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예산은 42억 원 편성에 그쳤으며,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은 -14.3% 감소하여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미비하다.

정부의 긴축재정은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약자 복지”는 선별복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이는 곧 꼭 필요한 곳에만 제공되는 ‘최소 복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예산안에서 보여지듯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지출과 가장 시급한 노인부문과 기초생활 부문의 예산만 확대되었을 뿐 전반적인 복지예산은 축소되었다.

부자는 감세해주고 최소한의 약자 복지만 늘리는 방식은 전반적인 서민복지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3. “2024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202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 기획재정부. 2023.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 기획재정부. 2023.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보도자료”
- 이상민. 2023. “24년 긴축은 지출구조조정 덕이 아닌 내국세 감소 탓”. 나라살림브리핑 332호
- 이상민. 2023. “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나라살림브리핑 335호
- 열린 재정. 재정사업설명자료
-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경향신문. 2023.10.17.